

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
22-52

'22년 재정 조기집행 계획

2022. 1. 6.

관계부처 합동

순서

I . 추진배경	1
II . 상반기 조기집행 관리계획	2
III . 조기집행 관리방안	4

I. 추진배경

□ ['21년 실적] 최대 규모의 재정을 신속·효율적 집행 → 성장을 제고

- 코로나 충격 속에서 **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 집행**으로 G20 선진국 중 **가장 빠른 경기회복** 흐름을 지속하는데 기여
 - * 가장 먼저(1/4분기) 위기 전 GDP 수준 회복, 평균 성장률('20~'21년) 최고 전망
- (상반기 조기집행) 중앙재정에서 **역대 최고실적**을 달성하는 등 재정별 집행목표 초과달성
 - * 연도별 상반기 집행률(%): ('11) 56.8 ('12) 60.9 ('18) 62.1 ('19) 65.4 ('20) 66.5 **('21) 68.2**
- (연말 집행 최대화) 중앙재정 **+50.8조원** 등 '20년 대비 집행 규모가 **+92.9조원** 증가(추정치, 2.10일 세입·세출 마감 후 잠정치 산출)

재정별 '21년 조기집행 실적

구 분	집행규모(조원)		집행률(%)	
	목표	실적	목표	실적
중앙재정	216.5	234.2	63.0	68.2
지방재정	141.8	152.0	60.0	64.3
지방교육재정	12.1	14.4	63.5	75.6

재정별 '21년 집행규모(추정)

구 분	집행규모	전년대비 증가액	집행률 (%)
지방재정	468.0	+36.0	89.3
지방교육재정	83.7	+6.1	95.5

□ ['22년 여건] 경기개선흐름 속에서도, 연초까지 민생 어려움 지속 우려

- 소비·투자·수출의 고른 증가로 **경기회복세**를 이어갈 전망
 - 다만, 코로나 변이, 공급망 차질 장기화,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 **대내외 불확실성 공존**
 - 코로나 지속으로 인한 취약계층 피해 누적, 생활물가 상승 등 금년 초까지 **민생의 어려움**이 지속될 우려

⇒ **완전한 경제 정상화 및 민생안정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확장재정(607.7조원, 8.9%↑)을 활용한 선제적 대응 노력이 긴급**

II. 상반기 조기집행 관리계획

- ◇ ①2022년도 확장재정 효과를 최대한 앞당겨 창출하고
 ②완전한 경제 정상화 및 민생안정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
선제적·적극적인 재정집행 관리



□ [집행관리대상] 집행관리가 필요한 사업을 선별하여 집중 관리

- 인건비 등 집행시점·규모가 정해져 있어 집행관리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 → 중앙재정 집행관리대상 규모는 약 200조원*
- * 집행관리대상은 사업 세부계획 확정에 따른 부처 협의(1월중) 및 2.10일 세입·세출 마감에 따른 '21년도 이월액 반영 등으로 변동 가능
-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성 기금 및 금융성 기금 등 28개 기금과 국회·선관위 등 집행 독립성이 필요한 기관의 예산 제외(104조원)
- 인건비·기본경비 및 급여성 의무지출, 보통교부세(금), 재난복구, 정책금융 출자·출연 사업 등 제외(303조원)
-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조기집행 관리대상 규모는 각각 234.0조원과 22.2조원

□ **[조기집행 목표] 상반기 경기보완을 위한 조기집행 기조 유지**

① (중앙) 관리대상 규모 200조원, 조기집행 목표 **63.0%**(126조원)

* 조기집행 목표(%): ('18) 58.0 ('19) 61.0 ('20) 62.0 ('21) 63.0 (**'22) 63.0**

② (지방) 관리대상 규모 234조원, 조기집행 목표 **60.5%**(141.6조원)

* 조기집행 목표(%): ('18) 57.0 ('19) 58.5 ('20) 60.0 ('21) 60.0 (**'22) 60.5(+0.5%p)**

③ (지방교육) 관리대상 규모 22.2조원, 조기집행 목표 **64.0%**(14.2조원)

* 조기집행 목표(%): ('18) 58.6 ('19) 62.0 ('20) 63.0 ('21) 63.5 (**'22) 64.0(+0.5%p)**

'22년 상반기 관리대상사업 재정집행 계획

(단위 : 조원, %)

구 분	2022년(잠정)*		
	연간계획	상반기 계획	
		금액*	집행률
중앙재정	200	126	63.0
지방재정	234	141.6	60.5
지방교육재정	22.2	14.2	64.0

* '22년 연간계획 및 상반기 집행 규모는 '21년도 이월액 추가 반영 등으로 변동 가능

□ **[중점관리 사업군] 6대 핵심사업군을 선정하여 중점 집행관리**

-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고 선도형 경제기반 구축을 위한 핵심 사업군에 대해 집행실적·전망 등 밀착 점검
 - 집행애로요인 등에 대해 선제적 대응·해소하고 범정부 논의·협력을 통해 차질없는 사업이행을 뒷받침

<분야>	<핵심 사업군>	<관리규모>
민생경제 회복 뒷받침	①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	18.5조원
	② 일자리 창출 및 유지	14.8조원
	③ 사회기반시설(SOC) 확충	28.0조원
선도형 경제기반 구축	④ 한국판 뉴딜	33.1조원
	⑤ 탄소중립 재정투자	11.4조원
	⑥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	1.2조원

Ⅲ. 조기집행 관리방안

① 신속한 예산배정 및 자금배정 추진

- (예산배정) 247조원(일반·특별회계 총계의 49.6%) 규모의 1분기 예산배정 완료(1.3일) → 신속한 계약, 사업공고 등 사업착수 유도
 - * 3월 중 113조원(일반·특별회계 총계의 22.7%)의 2분기 정기 예산배정 실시 예정
- (자금배정) 1월 정기 자금배정(1.7일 예정) 51.7조원 등 수요에 맞춘 자금배정으로 1/4분기 신속한 재정집행을 적극 지원

② 사업별 집행 사전절차 조기 완료

- (총액계상사업)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사업, 문화재 보수정비 등 총액계상사업(2.8조원)의 세부 사업예산내역을 조기 확정(1월 중)
- (총사업비 관리 사업) 총사업비 확정·변경이 필요한 사업*은 최대한 신속하게 관계기관 협의절차를 완료하고 집행 개시
 - *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 사업추진이 결정된 사업, 실시설계가 완료된 사업 등
- (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 사업) 지난해 미리 예산을 배정(21.12.22일)한 사업*은 공고·계약 및 대상자 선정 등 집행절차에 즉시 착수
 - * 코로나 예방접종 실시(1,179억원), 재해대책비(457억원) 등 총 10조원

③ 중앙-지자체 간 집행 협력체계 신속 가동

- (중앙부처) 지자체 보조사업(79.5조원)에 대한 자금교부 계획을 지역별로 조속히 결정·통보(확정내시)
- (지자체) 국비에 대응하는 지자체 분담분을 신속 확보하고, 예산에 미반영된 경우 예산 성립 전 국비사용제도 적극 활용